# 올림픽평화 운전면허발행처 '가리왕산'

**이경렬**
체육시민사회 자유활동가
체육교육전공
체육시민사회, 스포츠인권의 관심
tdcboy@hanmail.net

"평창에 다녀온 분들 말이 평창 고속열차가 좋다고 하는데 북에 오면 참으로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 낸 말이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대화의 물꼬를 평창동계올림픽이 틀어 준 것이다. 기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로부터 촉발된 결과나 다름없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평창동계올림픽 반대운동을 펼쳤던 장본인으로서 요즘 입장이 난감하다. 지난 1월 어느 매체에 '시민이 참여하는 올림픽이'라는 주제로 쓴 글의 첫 문장이 "열리지 말았어야 했다"였고, 마지막 문장을 "앞으로는 열리지 말아야 한다"로 장식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안 열렸으면 어쩔 뻔 했을까"하고 우물우물 되뇌게 된다.

출처: shutterstock

열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재정낭비, 환경파괴, 인권침해, 정치도구화 등 문제점이 산적했다. 일부분은 여전히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더욱 골이 깊어지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평창동계올림픽은 추상적인 평화를 넘어 너무도 실체적인 '연내 남북한 종전 선언 추진' 이라는 올림픽 역사에도 길이 회자될 올림픽의 순기능 또는 가치를 실현시켰다. 그렇다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그동안 벌어진 문제를 상쇄시키는 건 아니다. 최근 가리왕산 복원 관련 뉴스에서 강원도의 태도를 보노라면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 그럼에도 근래 강원도에서 의욕적 추진하려는 2021남북공동아시안게임 유치 움직임엔 딱히 반대를 못하겠다. 나아가 2030동북아 월드컵, 2032년 서울 · 부산 · 평양 · 원산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계획을 접하면 머리는 아픈데 심장은 두근거리니 이를 어찌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머리가 아픈 이유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발현한 평화가 그간의 만국 공통현상이었던 올림픽 재앙을 은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폐막 후 평창동계올림픽 과제·담론 경향

세간의 평과는 어떨까. 올림픽이 막을 내리자 체육학계, 국회, 강원도 등 여러 단위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행사가 진행됐다. '성과'는 두말 할 것 없이 남북평화 조성으로 모아졌다. '과제'는 다음 [표 1] 처럼 올림픽 레거시로 일컬어지는 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아시아 동계스포츠 거점화, 남북동계스포츠 교류 활성화 등으로 정리된다.

[표 1] 해당기관 및 부처에서 제시한 평창동계올림픽 과제

| | | |
|---|---|---|
| 정계 | 염동렬[1] | ■ ODA 프로그램(동계스포츠 변방국가 대상)<br>■ 관광개발(올림픽레인보우 트레인)<br>■ 한중일 올림픽 공동개최,남북 공동 평화올림픽 개최 |
| |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2] | ■ 대회 이후 시설 사후활용 방안 필요<br>– 세금절감과 효율적 국고 활용 합리적 재원지원 및 경기장 사후활용 대책안 필요<br>■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경기력 향상대책 수립 · 지원필요<br>–종목 저변 시설 확충과 선수양성 체계 보안, 페럴림픽 인식제고 캠페인<br>■ 관광 레거시 활용방안 마련 필요<br>–경강선 KTX을 활용한 연계 관광상품개발,국제회의 등 MICE 유치 등을 통한 대회 시설물의 효과적 활용,<br>아시아 스포츠 허브 프로그램과 같은 ODA프로그램활용, |
| 학계 (강준호, 임충훈[3]) | |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br>■ 시대교체(적폐청산) / 한국스포츠제도와 문화 선진화<br>■ 관광 및 교통인프라 구축<br>■ 국내외 동계스포츠 거점(ODA) / 올림픽 레거시 전담기구 필요<br>■ 장애인스포츠 제도적 기반정비 |
| 문체부 | | ■ 사후활용 방안 미정 3개 시설 지원검토<br>–강릉스피드스케이팅, 강릉하키센터, 올림픽슬라이딩센터 일정부분 지원 검토, 공유재산 양도 등<br>■ 올림픽플라자 유산조성사업 추진<br>–다목적 공연장, 올림픽 기념관, 올림픽 공원 · 광장 |
| 스포츠정책과학원[4] | | ■ 남북스포츠교류<br>–북한인력대상 스포츠 지식공유사업, 남북 스포츠교류재단 설립, 남북 대회시설활용 동계스포츠대회 개최, 남북스포츠 연구 등<br>■ 스포츠국제교류협력<br>–저개발국가 대상 지식공유 프로그램, 스포츠분야 인재 국제화 사업, 동남아시아 동계스포츠 육성,<br>스포츠ODA성평등 확장<br>■ 올림픽을 통한 스포츠대중화 및 생활체육 참여 증대<br>■ 평창 스포츠앙트러너 네트워킹<br>–올림픽 시설 사후활용에 사회적 기업 참여 촉진<br>■ 스포츠 토대 지속가능발전 다자간 협력 개발 토대 구축 |
| 강원도[5] | | ■ 올림픽 시설 운영주체 정부 변경을 위한「동계올림픽특별법」개정 추진<br>■ 올림픽플라자 유산조성사업<br>–국가대표 훈련시설로 활용 등<br>■ 기술기반형 스마트 관광산업 육성<br>–경원선 동해선 등 남북 관광 추진<br>■ 동계올림픽 기반 문화예술 글로벌화<br>–올림픽 전시문화예술 공간 상설화 등<br>■ 남북 및 북방교류의 전초기지화<br>–2021남북공동아시안게임 유치, 남북 동계스포츠 공동훈련 거점화, 중국 러시아 교류 및 경제협력 사업 가속화<br>■ 추후 메가스포츠이벤트 유치로 경기장 사후활용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리왕산 환경파괴와 복원문제, 경기장 건설로 인한 주거 · 노동권 침해로 대표되는 인권문제, 올림픽 유치와 진행과정에서 실종됐던 민주적 숙의시스템의 필요성은 담론으로 형성되지 않았다. 올림픽 평화에 대한 책임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말하자면 한국이 국제사회에 올림픽 평화를 확산시켜야할 의무, 그리고 올림픽으로 발생되는 폭력과 인권침해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저지해야할 책무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다. 대내적 · 대외적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시도해

1) 염동렬(2018.4).평창올림픽 사후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국회의원 안민석,염동렬,이동섭
2) 국회사무처(2018.3).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3) 임충훈(2018.4).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과와 향후 과제 자료집.한국체육언론인회 · 한국체육기자연맹
4) 조현주,최동주,최준규(2018).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레거시지속가능발전방안.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본다. 대내적 과제는 정선알파인 경기장 건설로 발생된 환경 · 인권문제 그리고 복원을 둘러싼 갈등이고, 대외적 과제는 올림픽 평화의 책임성이다.

### 대내적 과제 : 가리왕산 환경파괴와 강제이주 그리고 복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가장 논란 중 하나는 가리왕산 환경파괴였다. 가리왕산은 500년 간 보호된 극상림으로 한국특산종인 왕사스레나무의 자생군락지이자 국내대표 풍혈지대다. 경기장 선정 당시에도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이었다.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가리왕산 나무 10만 그루를 잘라버렸다. 게다가 경기장 부지 인근에 살았던 마을 주민의 집들도 부셔버렸다. 정산알파인 경기장은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숲과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마을이 파괴된 자리에 세워진 것이다.

### 정선 알파인 경기장 건설과정과 환경보호 운동

2011년 7월 강원도는 가리왕산을 알파인 스키 활강경기장으로 선정했다. 가리왕산을 지목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알파인 스키 활강경기 기준인 표고차 800m의 조건. 둘째는 올림픽 유치 때부터 대대적으로 선전한 이른바 '콤팩트 경기장'으로 불리는 '모든 시설 올림픽메인스타디움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는 단 '3일을 위해 500년 극상림이 파괴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입장을 발표하며 가리왕산 환경보호 운동을 전개했다.

2012년 산림청은 가리왕산 복원을 전제로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전, 복원 계획>을 수립 발표했고, 2013년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총면적 2,475ha 중 약 3%인 78.3ha의 해제를 고시했다.[5] 이에 환경단체는 경기장 건설 철회를 위해 국내는 물론 IOC와 국제스키연맹에 '2RUN' 규정'과 '표고차 750m 예외규정' 적용을 촉구했다. 2015년에는 환경단체 뿐만아니라 문화, 체육 등 여러 단위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평창동계올림픽분산개최를촉구하는모임'을 발족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 정책제안서」를 발간하여 IOC<어젠다2020>에 대처한 환경보호, 재정절약, 남북평화를 목표로 분산개최 운동을 벌였다. 이때 이미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을 알파인 활강 경기장 분산개최지로 지목하여 올림픽을 통한 평화조성을 피력했었다. 분산개최 운동은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었다. 요컨대 2015년 7월 CBS방송사에서 실시한 여론결과 79%가 분산개최를 찬성했고, 강원도지역은 이보다 높은 83%를 기록했다[6]. 이처럼 분산개최를 지지하는 여론이 확산되었지만, 총리, IOC조정위원장, 관련 부처 고위 관료, 강원도지사,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모두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분산개최는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스키장 건설 철회의 마지막 기회가 이렇게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정선알파인 경기장은 2016년 1월에 개장했다. 참고로 정선알파인 경기장 건설에 들어간 세금은 2,064억 원이다. 경기장 규모는 184만㎡ 부지에 코스길이는 2,648m이고 슬로프는 55미터 높이에 길이는 2,850m에 달한다.

5) 산림청 보도자료(2013.7.3.),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

6) CBS(2015.720),국민 10명 중 8명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해야"

### 스키장 때문에 터전과 삶을 잃은 정선읍 숙암리 주민들

정선알파인 스키장 건설은 환경파괴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권파괴를 저질렀다. 가리왕산 아랫마을 정선군 숙암리 50가구가 스키장 건설로 집단이주를 해야만 됐다. 대부분 조상대대로 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강원도는 이주자에게 이주단지 마련, 이사비용 지원, 이주 보상비 지급을 약속했다. 그런데 보상 기준을 토지와 건물로 한정했다. 이는 이주민에게 불합리한 기준이었다. 이주민들 중에서 땅과 건물을 가진 사람은 소수였고, 땅이나 건물이 자식 명의로 된 사람도 더러 있었다. 강원도는 각각 사정을 무시한 채 문서상 주인에게만 보상을 했고 이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강제수용 절차를 강행했다[7]. 보상을 많이 받은 사람은 타지로 떠났지만 세입자나 재산이 적은 사람들은 갈 곳이 없었다. 강원도는 스키장 옆 부지에 이주단지를 선정했고, 건설기간 동안 인근 폐교를 보수하여 임시거처를 만들었다. 임시거처 방은 10평 남짓했고 벽에 전기패널을 설치한 수준이었다. 네 가구가 방 한 칸씩을 배정받아 이곳에서 일 년을 지냈다. 이곳에서 겨울을 보냈던 신옥녀(82)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소회했다.

"난생처음 그렇게 추워봤어요. 얼어 죽을 뻔 했어. 돈이나 있으면 전기를 돌릴 텐데 나 같은 늙은이는 돈이 없으니까, 전기패널을 돌릴 수가 있어야지. 그해 겨우 내 조그마한 전기장판 깔고 잘 때는 두꺼운 잠바 입고 머리까지 이불 폭 뒤집어쓰고 살았다니까. 화장실도 겨울 되니까 얼어 터져서 볼일을 볼 수가 있나."[8]

50여 가구 중 13가구만 이주단지로 이사했다. 평생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라 논과 밭 하나 없는 이주단지로 이사를 갈 수 없었다. 또한 이주민 중 60세 미만의 사람들은 올림픽으로 생긴 시설에서 비정규직 취사원 또는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많다. 이주단지 노인들은 이마저도 할 수 없어서 고립된 삶을 보내고 있다. 애초 강원도는 숙암리 마을 주민 이주논의를 정선군번영회관계자에 한에서만 실시했다. 이주 논의에서 제외당한 주민들이 부당현실에 맞서지 못하고 이주를 합의한 이유는 저항해봤자 소용없고, 나라행사는 막아낼 수 없다는 일종의 무력감에 기인한다.[9]

### 강원도민 탄원서가 아닌 국민숙의과정이 필요하다

올림픽이 끝나자 가리왕산 복원 보다 재해방지가 쟁점이 됐다. 2018년 3월 산림청에서 발표한 <정선 알파인경기장 산사태 안전관리 대책>에 의하면 가리왕산에 시간당 75.2㎜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스키장 슬로프 최상부와 지표수가 집중되는 슬로프 중간 아래쪽 급경사면에서 토석류가 발생해 경기장 아래에 위치한 호텔과 하천까지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나타났다[10]. 산림청은 2018년 7월 말까지 우기를 대비하여 정밀지반조사를 실시하고 복원을 고려한 재해예방시설 및 산사태 위험시 경계피난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반면 강원도청은 산사태 논란에 태연하기만 하다. 강원도청 올림픽 설상시설 담당자는 언론인터뷰에서 "3년 동안 여기에 있었

7) 워커스(2017.11.14.)."활강 스키장, 저기가 내 고향이야" 평창올림픽이 쫓아낸 사람들

8) 2018시민프레스센터(2018).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이야기 : 한 개인을 '쓸모없음'으로 추락시킨 올림픽.8~9면

9) 윤지혜(2017). 가리왕산 논쟁; 주민들의 시각에서.문화연대.〈평창동계올림픽,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워크숍 자료집

10) 한겨레(2018.5.7).흉물로 변한 가리왕산 스키장 … 산사태 '발등의 불'.14면

는데 비가와도 그렇게 크게 와장창 내려오는 게 없었다."며 당당한 자태를 뽐냈다[11].

강원도와 정선군은 정선 알파인스키장 존치를 주장한다. 2021남북공동아시안게임 유치를 하여 남북스포츠 교류 촉진과 평화조성 그리고 경기장 사후활용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이다. 여세를 몰아 강원도는 2019년도 정부예산에 2021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 개최를 위한 준비 금액 50억 원 편성을 요청했다[12]. 아울러 2018년 5월 15일 정선군번영회는 산림청과 국회 국무조정실에 방문하여 정선군 주민 4,600명의 서명을 받은 알파인 경기장 보존 탄원서를 제출했다. 같은 시기 전정환 정선군수도 아시아스키연맹 총회에 참석하여 정선알파인 경기장 보존을 주장하고 아시아스키연맹 16개 회원국 대표들에게 정선알파인경기장 존치 탄원서 서명을 받아내겠다고 선언했다[13]. 뭐니 뭐니 해도 강원도가 심혈을 쏟는 작업은 올림픽 경기장의 사후관리 주체를 강원도가 아닌 정부로 변경시키는 '국민체육진흥법 · 동계올림픽특별법' 개정과 '동계올림픽 대회시설 활성화 지원법' 제정 촉구다. 계절적 요인과 대중성 부족으로 시설 운영의 적자는 불가피하단다. 재정상황이 어려운 현실에서 연간 100억 원에 달할 비용을 충당시킬 재량이 없다며 강원도의 힘든 사정을 호소한다.

평창동계올림픽에 경기장에 투입된 예산비율은 국비가 75% 지방비가 25%다. 알파인 경기장의 경우 총 건설비 2,064억 원에서 국비가 1,548억 원, 지방비 516억 원이다. 강원도는 사후관리 비용도 개최비용 지원 수준인 정부 70%, 강원도 30%의 비율을 요구한다. 개최 전부터 폐막하기까지 강원도에서 그토록 불러댔던 평창동계올림픽 경제효과 64조 타령은 어디로 갔는지, 유독 사후관리 사안에선 입을 꽉 다문다. 이런 행태에 분노가 일어난다. 내가 낸 세금으로 열린 올림픽이니 시비를 따질 권리가 있다. 가리왕산 복원과 보존 문제는 강원도와 정선군뿐만 아니라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올림픽 유산에 매몰된 관점에서 벗어나 체육예산 지원의 형평성과 숙의과정, 안전예방, 올림픽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 구제 등 여러 사안을 풀어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추후 국제경기 남북공동개최가 국민의 성원을 받을 수 있다.

### 대외적 과제 : 평화와 재앙의 공존, 혼란의 2016-2018-2020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 바로 전에 열린 2016리우올림픽은 '평화'가 아닌 '재앙'으로 회자되었다. 올림픽 재앙(Olympic Catastrophe)은 2016리우올림픽을 반대하는 시민운동인 Jogos da Exclusão의 슬로건이며, 2016년 7월 1일 뉴욕타임즈에 실린 칼럼 'Brazil's Olympic Catastrophe'을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된 표현이다. 브라질 정부와 리우 시는 지난 2009년 올림픽 유치를 확정한 뒤 7년 동안, 리우 시 인구의 23%가 살고 있는 파벨라를 철거하여 7만7천여 명을 강제 이주시켰다. 또한 브라질 경찰은 치안유지와 마약소탕의 명분 아래 2015년 한 해에만 645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올림픽 시설공사 과정에서 노동자 11명이 사고로 사망했다[14].

평창 다음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의 경우 올림픽을 통해 평화보다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거듭나려고 한

11) JTBC뉴스(2018.5.12).장마 다가오는데…가리왕산 '산사태 무방비
12) 강원도민일보(2018.5.14).예산안 제출일 눈앞' 도 현안예산 얼마나 담길까
13) 프레시안(2018.5.15).정선알파인경기장 올림픽 유산 보존 탄원
14) 엠네스틱(2016.8.8.).2016 리우올림픽, 브라질 빈민가에 켜진 인권 경고등. 2016년 통권 57호

다.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여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가로 탈바꿈하려는 <2020개헌>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림픽을 명분삼아 인권을 탄압한다. 2017년 일본 정부는 2020도쿄올림픽 테러방지를 명목으로 범죄계획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 이른바 '공모죄법'(테러 등 준비 죄)을 시행시켰다. 정부의 시민감시와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노동권 침해도 발생했다. 도쿄 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이 될 신국립경기장 건설현장 노동자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월 190시간 넘는 사실이 밝혀졌고, 과로에 시달린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했다[15]. 거주권의 경우도 심각한 상태다. 신국립경기장 옆에 위치한 도쿄도영 아파트인 가스미가오카 아파트 230세대를 강제퇴거 시켰다. 이 아파트에 살던 많은 주민들은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었고 추방 시기를 전후하여 열 명 정도가 사망했다[16].

## 올림픽 평화는 IOC가 아닌 개최도시에 달렸다

앞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지점은 추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구현된 올림픽 평화의 국제적 적용 가능성이다. 따지고 보면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평화는 IOC보다 현 정부 노력의 결과다. IOC는 2008베이징하계올림픽, 2014소치동계올림픽, 2016리우하계올림픽 때 개최 국가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자행한 인권탄압과 재정피해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시절에도 IOC는 북한과의 분산개최 또는 공동개최에 부정적인 자세를 일관했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2014년 12월 9일 IOC에서 올림픽 <아젠다2020>이 발표된 후 국내 시민사회는 물론 북한마저도 올림픽 분산개최를 요청했다. <아젠다2020> 발표 삼 일 뒤인 2014년 12월 12일 북한은 조선신보를 통해 평창올림픽 마식령 스키장 분산개최는 하늘에서 준 기회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12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분산개최는 없다"라며 북한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고 IOC도 이에 동조하여 2015년 1월 14일 강릉에서 열린 제4차 프로젝트 리뷰 본회의 개회사에서 구닐라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분산 개최가 없을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17]. IOC는 평화올림픽을 해당 국가권력의 눈치를 보며 말 맞추는 수동적인 태도를 견지한 채 자신들의 존립을 위한 일에 관심을 쏟는 집단이다. 올림픽 평화실현은 올림픽 자체의 기능보다 개최국가의 정치력에 달린 셈이다. 한편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실현은 개최국이 전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가능했다. 이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 올림픽평화 운전대론

한국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발현된 평화를 특수성 아닌 전 세계 보편성으로 확장시켜할 책무를 부여 받았다. '한반도 운전대'를 넘어 '올림픽 평화 운전대'가 역사적 과제가 된 것이다. 과감한 용단을 내릴 때다. 한국

15) 연합뉴스(2017.10.11.),올림픽의 그늘…日경기장 건설현장서 한달 190시간 야근 후 숨져
16) 중앙일보(2013.9.7.) 강제철거 두번 당한 日노인 "올림픽 꼴도 보기 싫다"
17) 조선일보(2015.1.16) "평창올림픽 분산개최 없다" IOC린드버그 조정위원장 밝혀

주도로 IOC올림픽평화위원회를 발족하고 판문점에 본부를 만들자. 아니면 아예 올림픽 대안으로 많이 회자됐던 '올림픽 고정 개최론'을 한반도에 도입시키자. 그리스 연안에 '올림픽섬'이라는 바티칸형 독립국가를 만들자는 제안을 묻어버리고, 하계 개최지는 서울과 평양, 동계는 평창과 원산으로 올림픽 고정개최를 주장하자.

올림픽평화위원회의 활동방향은 올림픽 평화 프로그램보다 올림픽이란 이름으로 일어나는 인권탄압과 폭력 그리고 부패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이제 올림픽은 국가발전이 아닌 개인 삶의 보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대의를 위한 피해가 용인되고, 보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사라져야 한다. 이 모든 희망사항의 현실화는 평창동계올림픽 뒤처리에 달렸다. 가리왕산으로 대표되는 올림픽 특수죄를 제대로 심판받아 죄 값을 치러야 비로소 올림픽 평화가 만국 공통의 가치로 거듭날 것이다. 복원된 가리왕산에 꽃이 피고, 숙암리 주민들의 파괴 된 삶이 회복 될 때, 향후 올림픽도 꽃이 피고 회복된다. 우리 손에 달렸으니 손에 손 잡고 꽃 심고, 운전대도 잡아서 우리 살아가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평화를 향해 나아가자.

※이 글에 실린 내용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shutterstock